

#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 25일부터 단속 진행

## 서울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단속 요청 민원 682건에 달해 임기제공무원 5명 점검반 구성 다중이용시설 중심 현장 단속

서울시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월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요청 민원은 682건에 달한다. 관련 민원은 작년 1분기 458건, 2분기 579건, 3분기 637건, 4분기 65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달 25일부터 임기제공무원 5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양천구 신월동에 설치된 서울형 집중충전소. /서울시

서남·동남권, 서북·도심·동북권으로 나뉘어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 민원 발생이 많은 권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는 급속 589기, 완속 501기 등 총 1090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이중 단속 가능한 충전시설은 ▲강서구 에이스타워 마곡 ▲강서구

귀뚜라미냉난방기술 연구소 ▲강서구 마곡중앙광장 ▲강서구 연우넥스트파크뷰 ▲강서구 마곡M시그니처 ▲강서구 에이스타워II ▲구로구 퀸즈파크구 일 ▲성동구 메가박스스퀘어 ▲서초구 마제스타티티 타워 등 9개소, 26기다. 이는 전체의 2.7%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차 공간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아파트, 기숙사 제외)은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 일반차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 후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2017년 4월 이후 건축허가가 난 건물로 한정돼 단속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단속 가능한 시설이 적다"면서 "단속 방법에 대한 규정도 미흡해 현장에서 단속 공무원에 의해서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단속 대상 범위 확대와 단속 방법 개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

태다. 시는 전기차 충전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 사용 에티켓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해 시민 의식을 제고, 단속할 수 있는 시설이 적은 단점을 메워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용 전기차 충전기 1090기를 대상으로 충전 인프라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전기 설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신촌·홍대 접촉자 역학조사... 낙원동 주시”

서울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72명 1만 3405명에 진단검사 안내 문자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불똥이 서울의 다른 유흥가로도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태원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신촌, 마포구 홍대입구, 종로구 낙원동 등에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한 점을 토대로 이들 지역 업소 방문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전일보다 7명 늘어난 714명이다. 이 중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전날 대비 4명 증가한 72명으로 집계됐다.

나백주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서대문구 주점(다모토리5)을 방문한 외국인 3명이 확진됐고, 비슷한 시기 해당 주점을 방문한 서울의 20대 남성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며 “이 주점의 고객



14일 오후 마포구 홍대 일대에 소재한 주점에 임시 휴무 안내가 붙어있다. /뉴시스

명단과 카드 결제 내역을 조회해 199명을 파악했고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마포구 주점을 방문한 20대 남성이 확진된 이후 동행한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며 “접촉자 10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방문자 명단, 카드 이력 등으로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포구 홍대입구 일대에서는 ‘한신포차’와 ‘1943포차’가 확진자 발생되는 방문 장소라고 밝혔다.

나백주 방역통제관은 “홍대 주점의

경우 일행들이 감염된 것이므로 해당 주점이 감염의 근원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들이 대거 방문한 종로구 낙원동 일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할 만큼은 아니라고 보지만,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기지국 접촉자를 더 파악해 총 1만3405명에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 (왼쪽부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 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서울시-서울시교육청 간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긴급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 5·18 대표 기록물 한자리에... 특별전 개최

오월평화페스티벌 일환 온·오프라인 전시 병행

서울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대표적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이하 넘어 넘어)의 초판본 등 10개의 판본을 한데 모은 특별전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공동 주최하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인 ‘오월평화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시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네이버TV, 5·18TV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시’와 제한적인 ‘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전에는 ‘전남사회운동협의회 편(編), 황석영 기록’으로 저자가 표기된 출판사 ‘풀빛’의 1985년 최초 판본으로부터 2019년 나온 개정판 양장본까지 10개 판본이 전시된다.

조금씩 다른 초판본 3종과, 1985년 독일지역 제본판, 1985년 일본어판, 1987년에 비매품으로 유통된 사진자료 집 ‘넘어 넘어 2’, 1999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구 시리즈로 출간된 영어판, 그 저작권을 5·18 기념재단이 확보해 재출



‘넘어 넘어’ 홍보 포스터. /서울기록원

간한 2017년 영어판 등이 있다.

창비에서 2017년 나온 전면개정판부터는 저자가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위촉,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기록’으로 표기돼 있다.

한동안 존재가 숨겨졌던 저자 이재의의 당시 취재노트 원본도 전시된다. 이를 통해 최초 집필계획과 감시, 탄압을 뚫고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1980년 당시엔 검열돼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1980년 6월 2일자 국제면 기사 ‘Insurrection in South Korea’(남한에서의 봉기) 원본을 통해 외국인들이 본 그날의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260개 마련

서울시는 최종중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든다고 14일 밝혔다.

최중중 장애인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다. 뇌병변장애, 척수장애, 근육장애 등이 최종중에 해당한다. 탈시설 장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다.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은 오는 7~12월 6개월간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한다.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 일하는 ‘시

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눠 130명씩 선발한다. 시급 8590원이다. 월급은 시간제 일자리 89만7660원, 복지형 일자리 48만1040원이다. 이들은 장애인 권익 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 중 선발한다. 시는 공모로 수행기관을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12억원은 전액 시비로 조달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일반보일러 설치업체 고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가정용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일반보일러를 설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4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보일러 제조·판매·시공업체 단속을 벌여 위반사례 3건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했다.

/김현정 기자